

보도 일시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3. 2. 27.(월)
담당 부서 <총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책임자	과 장 편유림 (044-200-4430)
		담당자	사무관 나운경 (044-200-4432) 사무관 이주현 (044-200-4438)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책임자	과 장 전영재 (044-200-4464)
		담당자	사무관 우병훈 (044-200-4448)

##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 강화·후원방문판매 범위 조정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sup>1)</sup>(이하 ‘할부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sup>2)</sup>(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sup>3)</sup>(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1) 정부안 및 윤준병 의원안을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
- 2) 김교흥 의원안 및 김희곤 의원안을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
- 3) 정부안 및 서일준 의원안을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

-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 ③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 ⑤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

- 방문판매법의 경우 후원방문판매의 범위를 조정하여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이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소비자 보호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것 등이 추가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3개 법률이 시행되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보호 업무가 추진되는 한편, 후원방문판매원들의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개정안 주요 내용

### < 할부거래법 >

#### 가.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

- (개정배경)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 나.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 (개정배경)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

○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

- (개정배경)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 <참고> 개정 후 신고처리 절차



#### 라.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및 정비

- (개정배경) 현행법에는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부과상한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개정내용) ①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②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 <참고>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위반행위	기존	개정안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과태료 부과규정 없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행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불출석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미제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방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마.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정비

- (개정배경)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였다.
- (개정내용)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하였다.

\*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참고> 과징금 규정 주요 정비내용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준용	
<b>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b>		<b>추가</b>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준용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준용	
<b>제107조(결손처분)</b>		<b>추가</b>

## < 방문판매법 >

- (개정배경) 현행법상 후원방문판매\*는 대면 방문을 필수 요소로 규정하여 후원수당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전자거래 방식의 영업이 제한되었다.

\* “후원방문판매”는 사실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나, ①방문판매 + ②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영업이 제한되고 온라인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영업을 허용하여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개정내용)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후원방문판매의 범위에 포함하되, 해당 방식에는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확대되는 전자거래 방식에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적용된다.

<참고>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규제사항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판매원단계 및 수당지급	판매원 3단계 이상, 후원수당 1단계 이내	판매원 3단계 이상, 후원수당 단계 제한 없음
자본금의 규모	제한 없음	5억원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사항	의무사항
②후원수당의 지급상한	총매출액의 38% (부가세 포함)	총매출액의 35% (부가세 포함)
③판매상품 가격규제	160만원 초과 재화 판매금지	160만원 초과 재화 판매금지
음니트리션 기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시, 3대규제 <sup>1)(2)(3)</sup> 면제)	적용*	미적용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과 무관하게 3대규제 면제 불가

## < 전자상거래법 >

- (개정배경) 그간 지자체는 지역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을 보장받지 못해 지역 내 소비자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 (개정내용) 지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 보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위만 행사하던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을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하였다.
- ※ (공개정보 검색권) 소비자피해 예방 등을 위해 사업자나 소비자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  
(자료제출 요구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기관·단체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 >

- 오늘 국회를 통과한 3가지 법률안이 시행되면,
  - (할부거래법)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신고처리 기한·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후원방문판매원들의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성이 제고되며, 지자체가 직접 소비자 분쟁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권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향후계획 >

- 이번에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할부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할부거래법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정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들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붙임> 1. 할부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방문판매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1 할부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 제6항----- ----- ----- ----- ----- -----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 ----- ----- ----- 합병에 따라 ----- 분할에

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 다. (생략)

2. ~ 4. (생략)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따라 -----  
-----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  
-----  
-----  
-----  
-----.

1. ----- 제18조제6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

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의 상호·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  
-----  
-----  
-----  
-----  
-----  
-----.

1. ----- 제18조제6항-----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이 전계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 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 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 (생략)	제27조의3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 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제39조(시정조치) ① ----- ----- ----- ----- -----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제6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 까지, 제27조제1항·제3항부터 제7항까지·제10항, 제32조, 제3 3조를 위반하는 경우	1.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7항----- ----- ----- ----- 제27조의2, 제32조-----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
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가. ----- 제5항- -----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신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제49조(벌칙) 제47조제5항----- ----- ----- -----
제42조(과징금) ① ~ ③ (생략)	제42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징수, 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삭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 ----- ----- 제18조제6항-----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 -----.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 제5항----- -----
<신 설>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1항 ----- -----
<신 설>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 제5항----- -----
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8조제7항----- -----

3. (생 략) <신 설>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자
4.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 ----- -----
5. ~ 10. (생 략) <신 설>	5. ~ 10. (현행과 같음)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1. ~ 9. (생 략) <신 설>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



10. · 11. (생 략)	<u>것으로 통지한 자</u>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10. · 11.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1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u>&lt;삭 제&gt;</u>
14.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u>&lt;삭 제&gt;</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u>시장·군수·구청장</u> 이 부과·징수한다.	⑦ ----- <u>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경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연대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수금 관련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에게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이 취소·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방문판매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물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신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8. ~ 13. (생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29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제29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	② -----

<p>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lt;단서 신설&gt;</p>	----- ----- ----- ----- ----- <u>다만, 전자</u> <u>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u> <u>에는 그 판매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u>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u>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 -----법 인·단체-----</u> .
② 사업자 또는 관련 <u>단체</u> 는 제1항에 따른 <u>공정거래위원회</u> 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u>법인·단체</u> ----- <u>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③ <u>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u>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u>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기관</u>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u>이 나 법인·단체-----</u> .
④ 제3항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회</u>	④ ----- <u>공정거래위원회,</u>

<p><u>로부터</u>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 나 <u>단체</u>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으로부터</u> ----- <u>법인·단체</u>----- -----.</p>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